

“조합원 이익증진과 농약의 안전한 공급에 박차 가할 것”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전성주 이사장

1987년 소규모 농약사들 의기투합...공동구매·마케팅 '비용 절감'

82개 업체 참여 올해 185억원 매출 기대...물류 전문 자회사 운영

“30여년 전 농약을 구하기 어려워 뭉친 소규모 농약사들의 단체인데, 국가 식량안보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성주(사진)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이하 작물보호제조합) 이사장은 28일 “농약은 안전하게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위험물에 해당한다”며 “조합원의 이익증진과 더불어 농약의 안전한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작물보호제조합은 지난 1987년 농약 판매업체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당시만 하더라도 농약 수요가 큰 탓에 농약을 구매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특히 일부 제조업체가 농약을 선별적으로 공급하면서 소규모 농약사들의 피해가 컸다. 그러다 광주와 전남 지역 농약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구매에 나서게 됐다.

덩치가 커지면서 농약을 선점할 수 있었고, 제조업체와의 가격 협상을 통해 저렴하게 농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전 이사장은 “농약은 주로 연초에 조기 판매한다. 이때 구매하면 농번기인 5-6월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또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가격이 저렴해 조합원은 추가로 이익을 보는 구조로 결국 ‘규모의 경제’를 이룬 셈”이라고 설명했다.

작물보호제조합과 같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광

주에 48개, 전국적으로 910개가 있다. 이들은 공동구매, 공동 마케팅, 공동시설 운영 등으로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작물보호제조합은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 82개 업체가 참여해 있다. 올해 185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농약시장은 1조8000억원 규모로 적지 않지만, 최근 친환경농법과 농업인구 감소로 축소되는 추세다.

작물보호제조합도 단순히 농약 구매만으로는 조합원의 이익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물류 전문 자회사다. (주)디딤농은 작물보호제조합 자회사로, 농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설립됐다.

전 이사장은 “농약은 기본적으로 위험물이다. 그러나 해외와 달리 국내 농약 거래는 택배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취급되고 있다”며 “농약이 택배차에 실려, 수자원보호구역을 지나가다 전복이라도 된다면 환경 파괴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된다. 농약도 의약품처럼 취급돼야 한다”며 물류전문 자회사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물류 전문 자회사의 역할은 안전한 농약 물류 시스템 구축과 조합원 이익 증진이다. 작물보호제조합은 현재 국내 메이저 농약 제조업체 중 2곳의 전남지역 농약 물류 배송을 담당하고 있다. 농약 제조



업체로부터 조합 직접 농약을 받아와 물류센터에 보관하거나 직접 배송도 맡는다. 지난 2021년 신축한 1700평 규모의 물류센터가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농약 보관 창고는 야적장을 포함한 460평으로, 최대 60억 원어치 농약이 보관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 지게차 등 4대, 3.5 t 트럭 등 5대를 운용 중이다.

전국에서 이 같은 규모의 물류 창고를 운용 중인 곳은 광주전남작물보호제조합 뿐이라는 게 전 이사장의 설명이다.

물류 배송 직원들은 농약 관련 교육 이수자들로 농약에 대한 이해능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농약이 유출되는 등의 위급상황을 대처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또 농약별 소비자가 주의해야 하는 사항도 설명할 정도로 이 분야 전문가들이다.

물류 자회사 설립에는 우려곡절도 많았다. “물류 자회사를 설립하고 오해가 많았습니다. 대형 도매업체들은 우리 조합이 물류 사업을 독점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해 반대 의견을 냈죠. 그러나 농약의 안전한 운반이 목표인 것을 뒤늦게 알고 지금은 오해가 풀렸습니다.”

어찌보면 작물보호제조합의 안전한 물류 시스템의 안착은 법안 마련으로 손쉽게 처리될 수도 있는 문제다.

전 이사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장비를 갖추고 농약을 운반해야 하는 법안이 재정되면 더 없이 좋을 것”이라며 “조합의 이익을 떠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물류 창고는 야적장을 포함 약 460평으로 최대 60억원어치 농약을 보관할 수 있다. 아래 사진은 물류 창고 전경.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제공>



광주은행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2년 연속 선정

금융감독원 주관, 지방은행 유일

광주은행은 28일 ‘2023년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이번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광주은행은 플라워 샵과 연계한 ‘금융과 소상공인, 협력의 꽃을 피우다’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지방은행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광주은행이 유일했다.

“금융과 소상공인, 협력의 꽃을 피우다”는 근조 화환을 주력상품으로 운영하던 화원이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에서 진행되는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을 통해 은행 지원 내 ‘숍인숍’ 매장을 연 사례다.

지역 내 플라워샵과 연계한 ‘상생 복합 점포’를 통해 영세사업자는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와 매출 증대가 이뤄졌고, 광주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향기로운 꽃과 식물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경총 “광주공항, 무안으로 통합 이전해야”

광주경총(회장 양진석·취호원 회장·사진)이 광주·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총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경총은 광주와 전남 상생과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총은 이를 위해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공항통합이전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무안군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광주경총은 또 “정치권과 지역 사회단체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을 지원해야 한다”며 “소모적 논쟁보다는 광주·전남 상생 발전을 위해



지원 법령 제정과 화합 분위기 조성에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엇보다 무안군이 지역 발전을 위해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광주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 대신 이전으로 발생하는 지역경제 발전 효과를 제시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광주·전남은 이미 나주 공동혁신도시 유치, 빛그린산단 조성을 통해 상생의 모범을 보인 바 있다”며 “광주·민간공항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이라는 제2의 상생 발전의 결실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

“기업승계 지원법안 연내 통과해야”

중기중앙회,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확대 등 요구

중기중앙회(회장)는 28일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국회에 기업승계 지원법안을 연내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는 10% 인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한편 증분류로 제한된 업종 변경 요건을 대부분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 60세 이상 CEO(최고경영자) 비중이 81%에 이르고 70세 이상 비중은 31%에 달할 만큼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골든타

임”이라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지원 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 2세 경영인들이 참석해 기업승계 규제와 관련해 현장 실태도 소개했다.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은 “주변에 보면 기업승계 어려움으로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물려받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 등의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빅드림 실장은 “업종을 변경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어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업종 변경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아예 철폐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기중앙회 등 10여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지난 9일에도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직접 찾아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올해 국회 통과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21.76(+26.10)
↑ 코스닥	816.44(+6.19)
↓ 금리(국고채 3년)	3.648(-0.041)
↓ 환율(USD)	1293.70(-10.10)

사교육 부담에...지출 최다 나이는 17세 ‘3,575만원’

통계청, 2021년 국민이전계정...노동소득은 43세에 최대 27세 노동소득, 소비 웃돌아 ‘흑자’...61세부터 다시 적자

우리나라 국민은 교육지출 등으로 고등학생 시기인 17세에 1인당 3575만원을 지출해 생애주기상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세부터는 노동소득이 소비를 웃돌아 흑자를 기록하다가 61세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21년 국민이전계정’을 28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 간 경제적 자원 배분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는 지표로, 연령 변화에 따른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분석한다.

2021년 우리나라 국민의 총소비는 1천148조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2% 증가했다. 노동소득은 1040조원으로 5.7% 늘었다.

소비와 노동소득의 차액인 생애주기적자는 108조8000억원으로 11.6% 늘었다.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179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노동소득의 총액이 소비보다 더 많았다는 의미다.

유년층(0~14세)에서는 151조8000억원, 노년층(65세 이상)에서는 136조7000억원 각각 적자였다.

1인당 생애주기로 보면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는 17세로 3575만원을 썼다. 고등학교 시기에 공

공교육소비로 1151만원을 지출하는 등 교육소비의 영향이 컸다.

1인당 노동소득은 17세부터 생겨 43세에 3906만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생애주기로 보면 0세부터 26세까지는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어 적자를 보였다. 27세부터는 흑자가 발생하지만 61세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로 재진입하는 연령은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난 영향 등을 받아 2010년 56세, 2015년 58세 등으로 점점 늦춰지고 있다.

적자 규모가 가장 많은 시기는 소비가 가장 많은 17세(3572만원 적자)였다. 흑자가 가장 많은 시기는 노동소득이 가장 많은 43세(1792만원 흑자)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은행 가계대출 금리 8개월만에 다시 5%대

10월 0.14%p ↑...3개월째 상승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도 석 달 연속 올라 5%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0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04%로 9월(4.90%)보다 0.14%포인트 높았다. 올해 2월(5.22%) 이후 8개월 만의 5%대 금리다.

가계대출 금리는 6월(4.81%)과 7월(4.80%) 두 달 연속 떨어졌다가 8월(4.83%) 반등한 뒤 3개월째 오름세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4.56%)과 일반 신용대출(6.81%)이 각 0.21%p, 0.22%p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은 다섯 달, 신용대출은 넉 달 연속 올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형 금리(4.53%)의 상승폭(0.23%포인트)이 변동형 금리

(4.64%-0.13%포인트)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변동·고정금리 금리차도 한 달 새 0.21%포인트에서 0.11%포인트로 줄면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 역시 75.2%에서 67.2%로 8%포인트 줄었다.

기업 대출금리(5.33%)도 0.06%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금리(5.30%)와 중소기업 금리(5.35%)가 각 0.12%포인트, 0.01%포인트 상승했다.

가계·기업 대출을 모두 반영한 전체 대출금리는 5.17%에서 5.24%로 0.07%포인트 올라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